

##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문희<sup>1)</sup>

---

### 요약

---

본 연구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은 프로그램 논리모형으로 보육료 지원 수혜는 고객에 도달로 보았으며, 산출효과로 정책만족도를 초기산출효과, 자녀 추가 출산 의사를 중간산출효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 자녀를 둔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는 두 번째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초기산출결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가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비용 지원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간접적 효과는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주제어** : 유아교육, 보육, 비용 지원, 비용지원정책 만족도, 출산의사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앙정부의 부모 보육료 지원은 차등 지원과 무상보육,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되며,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은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부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비용 지원이다.

정부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부담을 부모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그 대상과 지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sup>2)</sup> 2009년 현

---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에는 하위소득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다자녀가구 지원으로 2010년 이전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자녀가 다수일 경우 연령이 어린 자녀 보육료를 일부 감액하였으나 2010년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과 무관하게 둘째 이상 자녀는 추가지원으로 하위소득 70%까지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영유아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명이었으나 2009년 12월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67.7%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한편,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 매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 1인당 일정 금액을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부모 보육·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되는 정책으로 선정하고(대한민국 정부, 2006)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보육재정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출산수준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보육료 지원 정책이 출산 수준 제고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정책입안자는 물론 국민들도 보육비용 지원을 출산 수준 제고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지원 수혜가 자녀 추가 출산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용 지원에 대한 인지, 비용 지원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지원정책의 만족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 근거하여 추가 출산에 이러한 정부 지원정책 수혜나 정책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출산수준과 보육정책 등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연구는 주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단위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러한 외국의 연구들은 그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2)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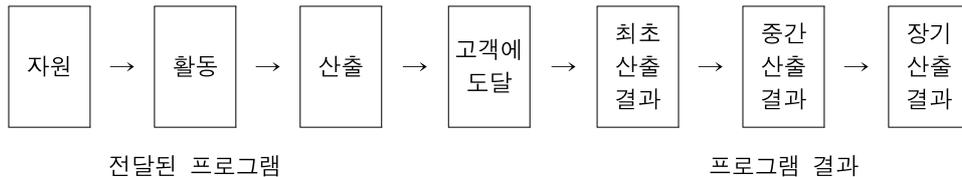
보육시설, 비용 등을 포괄한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육정책과 출산수준의 관련성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Sleeboos, 2003; Gauthier, 2001). 특히 Sleeboos(2003)는 OECD 국가들의 1998년 출산율과 1995~2000년의 보육 등록률을 이용하여 3세미만의 영아 보육 이용 가능성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하여 회귀계수를 0.01로 산출하고 설명력을 43%로 추정하였다. D'Addio와 Mira d'Ercole(2005)은 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이 출산력에 주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취합하여 보육시설의 이용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출산과 일의 조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이고, 반대로 육아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산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000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성 파악을 위하여 유사한 국내연구들이 추진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지원과 출산과의 관련성 연구로는 윤홍식(2006)은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이 2006년 신생아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2006년 출산과 출산 양육지원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한자녀 출산 후 2006년 출산한 가구와 미출산 가구를 비교 분석하여 보육료 지원이 한자녀 가정의 두 번째 자녀 출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 지원을 정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한편 국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보편화되면서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 모형에서 산출 이외에 산출결과(outcome)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저출산 완화 정책의 성과와 관련하여 성과의 단계를 세분화한 모형인 프로그램논리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논리모형의 단계는 크게 프로그램 전달(집행)과 프로그램 결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 전달단계는 정부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인 투입(inputs), 각종 서비스의 제공, 법률이나 규제의 집행 등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활동(activity), 그리고 자원과 활동으로부터 생성되는 직접적인 생산물인 산출물(outputs)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결과 단계는 정부 활동과 산출물로부터 나오는 편익으로 프로그램의 산출결과구조로 최초 산출결과(initial outcome), 중간 산출결과(intermediate outcome) 및 장기적인 산출결과(long-term outcome) 등이다(노화준, 2006). 보육비용 지원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자원은 예산 확대, 활동은 각종 지원사업이며 산출은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수 증가 등 이고, 최초 산출결과가 부모 양육부담

완화, 양육이 국가책임 강화 등이며, 중간산출결과가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고, 장기적 산출결과는 출산수준 제고이다.



자료: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그림 1]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국회예산정책처(2007)는 이러한 프로그램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을 활용하여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국민 800명과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정부의 저출산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의 우선순위, 저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여 총괄평가부분과 70여개 세부사업 각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출산예정이거나 향후 자녀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25.9%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최초 및 중간산출결과 효과가 있다고는 평가하였다.

이삼식 외(2008) 연구도 논리모형을 반영하여 저출산 정책의 논리성과 효과성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시계열 및 2007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보육·교육비지원이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39로 정적 효과를 보였고, 한편,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를 매개로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역시 정부의 보육 지원을 세분화하지는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윤정, 2009)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저출산 분야의 중요 정책 중에서 수혜대상자 및 예산투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어, 정부의 재정투자 노력에 비례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또한 보육료 지원 수혜는 추가 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안재진·최혜선 외, 2009)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인 출생순위별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구 출산 수준 및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개인 단위에서 보육료 교육비 지원정책이 자녀 추가출산 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전화조사 자료와 지방정부 정책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양육 비용 지원정책 중에서 차등보육료·교육비, 만5세아 무상 지원, 지방정부의 셋째아 현금지원이 차기 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비용 차등 지원과 만5세아 지원은 직접적 작용 이외에도 정책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 제고라는 매개를 통하여 출산 의사에 작용하며, 특히 한 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보육료·유아교육비 차등지원과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며, 두 자녀 가정에는 비용지원변수는 추가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육시설 이용이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양육지원은 추가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정책변수가 포함되어도 전체적 설명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하고 추가출산 의사가 출산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 Ⅲ. 연구 방법 및 분석틀

#### 1. 연구자료 및 변수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도 전국 보육 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중 영유아를 둔 가구 자료이다. 본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국가 보육 기초통계 생산 및 수요율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모집단은 2009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이고,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 90%의 조사구이다. 표본의 규모는 전국 257개 조사구로 조사구당 약 60가구를 조사하며 조사구내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파악하여 조사함으로써 총 5,000 가구를 조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sup>3)</sup> 실제 조사된 영유아 가구는 2,554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전국을 대표하는 영유아가구로서

3) 2004년 조사는 200개 조사구에서 12,000가구가 목표이었으나 2009년 조사는 출산수준의 저하로 조사대상 아동 확보를 위하여 표본가구수를 확대하였음.

조사 자료는 국가통계로서 대표성을 갖는다.<sup>4)</sup>

이들 조사 자료 중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별로 인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일반적인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만족도, 추가 자녀 출산의 사이며, 모나 가구의 특성변수로 모 연령, 모학력, 모취업상태 변수, 자녀수, 소득분위, 거주지, 부부 가사분담, 가족유형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필요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또는 재코딩하여 활용하였다.

## 2. 분석틀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프로그램논리모형이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논리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자원, 활동, 산출물, 도달된 고객, 최초 산출결과, 중간 산출결과 및 장기적인 산출결과 등이다.

본 분석에서는 보육료 지원 수혜를 고객에 도달, 정책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를 초기산출결과로 가정하고 추가 출산 의사를 중간단계 산출결과로 설정하였고, 보육료 지원 수혜가 추가출산의사로 이어지는 직접적 효과보다 보육료 지원 수혜가 인지 및 만족도라는 초기 산출결과를 매개로 하여 추가출산의사인 중간산출결과에 효과를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삼식 외(2009)의 연구나 서문희(2009)의 연구에서 시도되어 지원 수혜가 사회심리적 매개변수를 통하여 출산이나 출산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는데, 이들 연구와의 본 차별성은 보육비용 지원 정책별로 현재 수혜 여부를 별개의 변수로 투입하여 세부적으로 정책별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는 점과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전국 조사결과로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분석방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기술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다분류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지, 보육료·교육비 수혜가 가정경제에 대해 도움을 주는지 여부,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기술분석으로 살펴보고,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일반적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수혜와 만족도가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다분류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상세한 조사방법 및 일반적 특성은 생략하고자 하며, 서문의 외(2009)를 참조하기 바람.

## IV. 연구결과

### 1. 비용 지원에 대한 인식

#### 가. 비용 지원 정책 개요

본 분석에 사용된 비용지원은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다자녀 가구 아동 추가 지원, 만5세아 무상 및 장애아동 무상보육이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아동별로 지원하지만 시설에서 직접 수령하여 부모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은 약하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대표적 지원 방식으로 2009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까지 전액을 지원하였고, 70%까지 차등지원하였다. 다자녀 가구 아동 추가 지원은 2009년 당시 다수의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시에 연령이 어린 자녀의 비용을 일부 감액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장애아동 무상은 소득기준이 없으나 만5세아 무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까지 지원하였다.<sup>5)</sup>

차등보육료, 만5세아, 장애아 무상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건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79만5천건으로, 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비 67.7%이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도 2009년 기준으로 만3세는 56.4%, 4세는 52.3%, 그리고 만5세는 53.5%로 총 287,721명의 유치원 원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 지원으로 부모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 1>은 보육시설 이용의 사례로, 면제자의 경우에도 소득의 4.6%에 해당하는 평균 5만5천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하여야 하고, 감면자는 16만5천원으로 소득 대비 7.8%, 일반 아동은 평균 30만8천원으로 소득대비 9.6%를 부담한다.

5) 2009년 6월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나누고 그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였음. 예를 들어서 차등보육료는 2009년 하반기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소득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임.

〈표 1〉 보육료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68.1	114.3	53.8	(1,342)	7.4
면제	55.0	10.7	44.3	( 470)	4.6
감면	165.2	108.5	56.7	( 484)	7.8
일반	308.6	246.8	61.8	( 389)	9.6
F	1239.1**	1728.6**	16.0**		78.4**

주: \*\*  $p < .01$

#### 나. 비용 지원 정책 개요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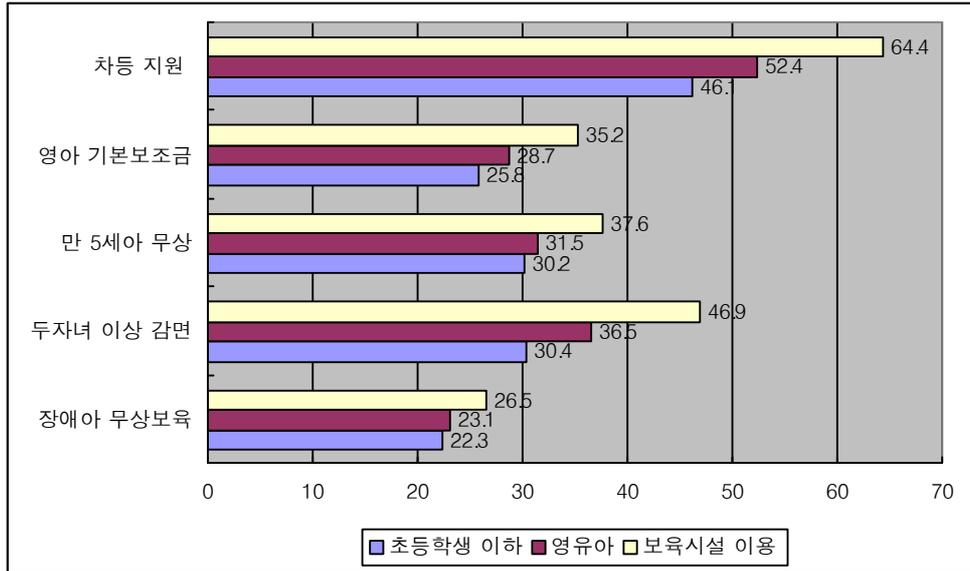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도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부모, 영유아 부모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정책인지도가 가장 높고, 영유아 부모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다소 낮아지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 부모에게로 확대하면 인지도는 더욱 더 낮아진다(표 2 참조).

〈표 2〉 조사대상 구분별 비용 지원 정책 인지

단위: %(명)

구분	초등학생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잘 알	어느 정도 알	잘 모름	잘 알	어느 정도 알	잘 모름	잘 알	어느 정도 알	잘 모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46.1	42.3	11.6	52.4	39.6	8.0	64.4	33.4	2.3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25.8	35.5	38.7	28.7	34.9	36.4	35.2	31.2	33.6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30.2	31.6	38.2	31.5	28.0	40.5	37.6	27.7	34.7
두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30.4	37.0	32.7	36.5	35.5	28.0	46.9	34.2	19.0
장애아 무상 보육	22.3	25.2	52.5	23.1	24.8	52.1	26.5	25.7	47.9
(수)	(4,897)			(2,547)			(1,328)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의 인지도는 낮아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64% 수준이지만 그 이외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다.



[그림 2] 비용 지원정책을 잘 안다는 비율

정책 인지도는 정책 수혜와 관련이 있다. 수혜경험이 높은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정책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수혜경험이 낮은 장애아 무상보육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를 받은 경험이 높은 지원정책일수록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 지원정책 수혜경험과 인지 간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영유아 부모의 경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정책 인지도가 높아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표 3 참조).

<표 3> 영유아 부모 중 비용 지원 수혜여부별 정책 인지

구분	잘 앎	어느정도 앎	잘 모름	계	(수)	단위: %(명)
						$\chi^2(df)$
차등지원						
현재 수혜중	72.1	27.7	0.3	100.0	793	349.5(2)***
과거 수혜 경험	72.9	27.1	-	100.0	282	
수혜 경험 없음	37.9	48.5	13.6	100.0		
전체	52.3	39.7	8.0	100.0	1076	

(표 3 계속)

구분	잘 앎	어느정도 앎	잘 모름	계	(수)	X <sup>2</sup> (df)
<b>기본보조금</b>						
현재 수혜중	60.1	37.9	2.0	100.0	153	243.2(2)***
과거 수혜 경험	53.6	43.8	2.6	100.0	195	
수혜 경험 없음	24.3	33.9	41.8	100.0		
전체	28.7	34.9	36.4	100.0	348	
<b>만5세아 무상</b>						
현재 수혜중	71.0	26.2	2.8	100.0	252	497.5(2)***
과거 수혜 경험	80.2	19.2	0.6	100.0	176	
수혜 경험 없음	22.9	28.9	48.2	100.0		
전체	31.5	28.0	40.5	100.0	428	
<b>두자녀 지원</b>						
현재 수혜중	73.7	25.6	0.6	100.0	157	258.2(2)***
과거 수혜 경험	74.6	25.4	-	100.0	172	
수혜 경험 없음	30.9	36.9	32.1	100.0		
전체	36.4	35.5	28.1	100.0	329	
<b>장애아 무상</b>						
현재 수혜중	80.0	20.0	-	100.0	20	na
과거 수혜 경험	100.0	-	-	100.0	5	
수혜 경험 없음	22.5	24.9	52.6	100.0	2523	
전체	23.1	24.8	52.1	100.0	2458	

주: \*\*\* p < .01, na 통계 산출 부적절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경우 정책 인지율은 매우 높다. 정책별로 보면 차등지원은 수혜 유경험 및 현 수혜자가 차이 없이 72~73% 수준이고 수혜 경험이 없으면 37.9%로 낮아지고 전혀 모른다는 비율도 14% 수준이다. 두 자녀 지원도 이와 유사하게 지원 경험자는 인지정도가 유사하지만 수혜경험이 없는 경우는 잘 안다는 비율이 30%로 낮아지면 32%는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다. 즉,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하는 부모가 상당수이다.

#### 다. 비용지원의 가정경제 지원 인식

다음은 영유아를 둔 가구의 정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여부별로 수혜받은 지원 정책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영아 기본보조금만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각 지원정책별 가정경제 도움 비율은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95.9%, 장애아 무상보육 92.7%,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92.1%, 두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91.1%, 영아 기본보조금 87.2%이다(표 4 참조).

<표 4>를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차등지원만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보육료 차등 지원이 차이가 없는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이 평균 90% 내외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 영유아 부모 중 수혜자의 가정경제 지원 효과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 됨	어느정도	많은 도움	계	(수)	X <sup>2</sup> (df)
<b>차등지원</b>						
현재 수혜중	7.7	47.2	45.1	100.0	( 793)	2.8(2)
과거 수혜 경험	11.0	45.6	43.5	100.0	( 282)	
전체	8.6	46.7	44.7	100.0	(1,076)	
<b>기본보조금</b>						
현재 수혜중	9.2	56.7	34.0	100.0	(153)	5.9(2) <sup>*</sup>
과거 수혜 경험	16.9	45.6	37.1	100.0	(195)	
전체	13.2	50.8	36.2	100.0	(348)	
<b>만5세아 무상</b>						
현재 수혜중	1.2	46.5	52.4	100.0	(252)	15.8(2) <sup>***</sup>
과거 수혜 경험	9.2	40.8	50.0	100.0	(176)	
전체	4.4	44.2	51.4	100.0	(428)	
<b>두자녀 지원</b>						
현재 수혜중	3.8	37.6	58.6	100.0	(157)	10.0(2) <sup>**</sup>
과거 수혜 경험	8.1	50.0	41.9	100.0	(172)	
전체	6.1	44.1	49.8	100.0	(329)	
<b>장애아 무상</b>						
현재 수혜중	10.5	21.1	62.4	100.0	( 19)	6.2(2) <sup>*</sup>
과거 수혜 경험	-	80.0	20.0	100.0	( 5)	
전체	8.3	33.3	58.3	100.0	( 24)	

주: \* p < .01, \*\* p < .05, \*\*\* p < .001

라.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1)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다음 <표 5>는 영유아 부모의 정부 비용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도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12.9%이고 보통이 31.9%이며 불만 39.5%, 매우 불만 15.6%로 만족도는 비교적 낮다. 지역별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도시 10% 수준보다

읍·면에서 18.6%로 만족도가 높고,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모 부재 가구가 취업모나 미취업모 가구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한다는 비율과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낮아지고 불만, 매우불만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5점 척도로는 2.43점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5〉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정부의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만족여부

단위: %(명)

구 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잘 모름	전체(수)	X <sup>2</sup> (df)
전체	14.8	37.5	30.2	11.7	0.7	5.1	100.0(2,549)	
지역규모별								
대도시	13.0	39.0	30.6	10.3	0.5	6.6	100.0(1,136)	57.5(10)**
중소도시	19.0	36.3	29.3	10.1	0.9	4.4	100.0( 977)	
읍·면	9.9	36.2	32.0	18.6	0.5	2.8	100.0( 436)	
모취업별								
모취업	15.4	37.7	31.5	11.4	0.5	3.5	100.0( 911)	31.0(10)**
미취업	14.8	37.7	29.5	11.1	0.8	6.1	100.0(1,574)	
모부재	6.1	30.3	28.8	28.8	1.5	4.5	100.0( 66)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10.2	21.9	34.3	25.8	0.8	7.0	100.0( 128)	228.8(45)**
100~149만원	6.8	25.5	36.2	24.7	1.3	5.5	100.0( 235)	
150~199만원	12.5	30.8	37.9	14.1	0.9	3.8	100.0( 425)	
200~249만원	10.3	34.1	34.7	13.8	1.3	5.8	100.0( 378)	
250~299만원	15.8	43.4	26.2	7.6	1.3	5.7	100.0( 316)	
300~349만원	16.8	40.5	28.7	9.1	0.3	4.6	100.0( 328)	
350~399만원	15.6	42.2	29.9	7.8	-	4.5	100.0( 154)	
400~499만원	23.3	42.9	23.2	5.3	-	5.3	100.0( 245)	
500~599만원	23.9	51.6	13.5	5.2	-	5.8	100.0( 155)	
600만원 이상	17.5	48.6	26.8	3.3	-	3.8	100.0( 183)	

주: \*\* p<.01.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 수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정책별로는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기본보조금, 만5세아 무상, 두자녀 지원 모두 수혜 현재 경험, 과거 경험, 무경험이 순으로 정책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장애아 무상은 과거 수혜자가 현 수혜자보다 더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6 참조).

〈표 6〉 영유아 부모 중 수혜여부별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수)	X <sup>2</sup> (df)	5점척도
전체	15.6	39.5	31.9	12.2	0.7	100.0 (2,418)		2.43
차등지원								
현재 수혜중	8.2	28.7	40.0	21.4	1.8	100.0 ( 785)	230.8(8)***	2.80
과거 수혜 경험	13.5	36.1	34.7	15.7		100.0 ( 272)		2.53
수혜 경험 없음	20.3	46.4	26.7	6.3	0.3	100.0 (1,359)		2.20
기본보조금								
현재 수혜중	5.3	25.8	45.0	19.9	4.0	100.0 ( 151)	77.7(8)***	2.91
과거 수혜 경험	17.1	29.5	35.2	16.1	2.1	100.0 ( 193)		2.57
수혜 경험 없음	16.2	41.4	30.7	11.3	0.3	100.0 (2,073)		2.38
만5세아 무상								
현재 수혜중	8.1	21.9	42.9	26.7	0.4	100.0 ( 247)	105.8(8)***	2.89
과거 수혜 경험	9.9	36.6	37.2	14.0	2.3	100.0 ( 172)		2.62
수혜 경험 없음	17.0	41.9	30.1	10.3	0.7	100.0 (1,988)		2.36
두자녀 지원								
현재 수혜중	8.4	23.2	41.9	25.2	1.3	100.0 ( 155)	83.3(8)***	2.88
과거 수혜 경험	13.6	26.0	34.9	24.9	0.6	100.0 ( 369)		2.73
수혜 경험 없음	16.3	41.8	31.0	10.3	0.6	100.0 (2,093)		2.37
장애아 무상								
현재 수혜중	5.3	31.6	42.1	15.8	5.3	100.0 ( 19)	9.4(8)	2.83
과거 수혜 경험		50.0	25.0	25.0		100.0 ( 4)		2.81
수혜 경험 없음	15.7	39.6	31.9	12.2	0.7	100.0 (2,393)		2.43

주: \*\*\*  $p < .001$ .

## 2) 보육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결정 요인

다음은 각각 유형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수혜가 일반적인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은 두 가지로 각 보육료·교육비 지원 유형별 수혜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할 경우와 이외에 모의 특성으로 모 연령, 모 학력, 모취업상태 변수, 자녀수, 소득분위, 거주지 등 가구 특성을 포함하는 경우의 두 가지 모형으로 실시하였다.

사용된 변수의 처리는 종속변수는 1~5점 척도의 만족도 점수를 연속변수로 포함하였고, 독립변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유형별 수혜 변수는 수혜 여부를 더미화하였고 모취업, 거주지역, 모의 학력을 모 취업, 도시거주, 대학이상 학력으로 구분하여 더미화하였으며, 이외에 소득 10분위, 모의 연령 및 자녀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성은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두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형 모두 자녀 추가 지원을 제외한 보육료 교

육비 지원정책의 현 수혜자가 그 이외 사람들에 비하여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만5세아 무상이 유의도가 비교적 높고 장애아 무상과 영아 기본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유의도가 낮다. 어머니와 가구의 특성이 독립변수로 포함된 경우 소득분위, 모취업 상태, 도시거주, 모 대학이상 학력 변수가 정책 만족도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모, 도시보다는 농촌, 모 대학학력 이상보다는 이하에서 정책만족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만족도 설명력은 모형1이 13%, 모형2가 11% 수준이다.

〈표 7〉 일반적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 영향 요인

구분	모형2				모형1			
	B	표준오차	Beta	t	B	표준오차	Beta	t
(상수)	2.849	0.143		19.88***	2.192	0.022		98.195***
소득분위	-0.051	0.007	-0.158	-6.90***				
모취업(1=취업)	0.100	0.039	0.052	2.56**				
도시거주(1=도시)	-0.145	0.048	-0.058	-3.01**				
대학이상(1=대학이상)	-0.096	0.038	-0.052	-2.50*				
모 연령	-0.004	0.004	-0.020	-0.99				
자녀수	-0.035	0.029	-0.025	-1.23				
차등지원(1=현 수혜)	0.356	0.044	0.181	8.11***	0.506	0.041	0.257	12.48***
기본보조금(1=현 수혜)	0.200	0.078	0.053	2.55*	0.181	0.078	0.048	2.31*
만5세아 무상(1=현 수혜)	0.413	0.061	0.134	6.73***	0.481	0.059	0.158	8.10***
두자녀 지원(1=현 수혜)	0.122	0.079	0.033	1.55	0.072	0.078	0.019	0.92
장애아 무상(1=현 수혜)	0.466	0.205	0.044	2.28*	0.462	0.200	0.044	2.31*
R <sup>2</sup>	.134				.108			
(수)	(2,359)				(2,423)			

주: \*  $p < .01$ , \*\*  $p < .05$ , \*\*\*  $p < .001$

이러한 만족도는 2009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분석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2009년에 여섯 가지 양육비용 지원 정책 각각에 대한 인지 및 수혜 여부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여러 양육비용 지원정책들 가운데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차등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 경험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두 정책은 본 분석에서도 유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서 두 정책이 유용한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 2. 비용지원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영향

다음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의 효과로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가구와 한 자녀를 가진 가구로 구분하여 두 가지 모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를 보면, 종속변수는 추가 자녀 출산의사이고 독립변수로는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 영아 기본보조금,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 두 자녀 보육료·교육비 추가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교육 등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이외에 모의 특성으로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모 연령, 모학력, 모취업상태 등 모의 특성변수와 자녀수, 소득분위, 가족유형, 부부간 가사분담, 거주지 등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초기 산출효과로 추정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변수가 포함되었다.

변수의 처리는 종속변수는 추가 자녀 출산의사 있음, 없음의 이분화된 변수이고 5종의 보육 비용 지원 수혜, 모취업상태, 가족유형, 부부간 가사분담, 거주지는 1, 0으로 더미화하여 포함하였으며, 자녀수, 소득 10분위, 모 연령,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5점 척도 만족도는 연속변수이며 모학력은 다분류 변수이다. 이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 정도도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1을 보면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육료, 교육비 지원정책 중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두 자녀 추가 지원이 유의도 0.1 수준에서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아기본보조금,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은 별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추가 출산의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지원 이외 변수로는 모 연령, 자녀수, 모의 취업 상태가 유의도 0.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거주지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학력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많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보다 농촌, 취업모보다 미취업모가 추가 출산의사가 높으며, 모의 학력은 중학 이상이 중학에 비하여 자녀 추가 출산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소득분위, 부부간 가사분담, 가족유형은 추가출산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설명력은 27% 정도이다.

두 번째 모형은 한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추가 자

녀 출산의사이고, 독립변수는 모형1에서 사용된 변수와 비교하여 자녀수변수가 제외되었고 한 자녀의 성별 변수가 포함되었다.

〈표 8〉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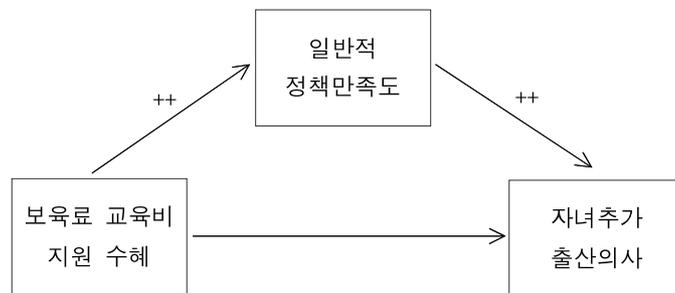
구분	전체			한자녀		
	B	Std. Error	Wald	B	Std. Error	Wald
(상수)	3.908***	1.391	7.891	0.261	1.630	0.026
자녀수	-1.967***	0.118	276.452	-	-	-
만족도	0.091	0.067	1.809	0.247**	0.089	7.641
소득분위	-0.008	0.025	0.119	0.010	0.032	0.108
모 연령	-0.151***	0.014	112.040	-0.144***	0.017	70.992
차등지원(기준=미 수혜)	-0.277#	0.146	3.599	-0.357#	0.201	3.161
기본보조금(기준=미 수혜)	-0.039	0.272	0.021	-0.169	0.421	0.161
만5세아 무상(기준=미 수혜)	-0.169	0.233	0.528	-0.685	0.458	2.241
두자녀 지원(기준=미 수혜)	0.512#	0.282	3.300	-	-	-
장애아 무상(기준=미 수혜)	-1.612	1.144	1.987	-1.557	1.255	1.540
모학력(기준= 중학이하)						
고졸	0.658#	0.363	3.280	0.693#	0.398	3.028
대학	0.975***	0.375	6.768	1.218**	0.419	8.437
대학교	0.924*	0.375	6.062	1.140**	0.417	7.478
대학원	1.122*	0.469	5.706	0.956#	0.538	3.152
모취업(기준=미취업)	-0.494***	0.133	13.793	-0.535**	0.170	9.932
가족유형(기준=확대)	0.056	0.166	0.113	0.155	0.203	0.580
가사분담(기준=모 전담)	-0.122	0.140	0.752	-0.194	0.186	1.087
자녀성별(기준=여)	-	-	-	-0.204	0.146	1.967
거주지(기준=도시)	0.496**	0.157	9.962	0.502*	0.219	5.247
-2 Log Likelihood	1924.4			1248.6		
$\chi^2(df=17)$	709.4(17)***			150.5(16)***		
cox and snell(유사 R <sup>2</sup> )	0.267			0.151		
(수)	(2,283)			(918)		

주: #  $p < .1$ , \*  $p < .01$ , \*\*  $p < .05$ , \*\*\*  $p < .001$

모형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양육비용 지원정책 유형 중에서는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만이 자녀 추가 출산의사에 부적 방향으로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영아 기본보조금,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두 자녀 추가지원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차등 보육료교육비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모형1에서 처럼 0.1 수준으로 그 의미는 취약하다. 또한 모형1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양육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한 자녀 가정에서는 추가 출산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만족도 변수의 유의도는 0.01 수준이다. 이외 변수로는 모 연령, 모의 취업 상태, 거주지, 모의 학력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방향을 보면, 즉, 어

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추가 출산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보다 농촌, 취업모보다 미취업모가 추가 출산의사가 높으며, 모의 학력은 중학 이상이 중학에 비하여 자녀 추가 출산 의사가 높은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다. 이외에 소득분위, 부부간 가사분담, 가족유형은 추가출산 의사와 무관한 것도 모형1과 동일하다. 이러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0.15 정도로 모형1보다는 많이 낮는데, 그 이유가 자녀 수 변수의 제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연구에서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과 정책 수혜 정도가 둘째아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양육비용 지원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추가로 둘째아를 출산하겠다는 의사가 높다는 점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즉, 보육비용 지원은 직접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 정책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는 가정일수록 추가 출산에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되겠으나 단순한 지원액 자체보다는 지원에 대하는 부모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3] 한자녀 가구 추가출산 의사 결정 모형

## V. 요약 및 시사점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부모 보육, 유아교육 비용 경감을 주되는 정책으로 선정하고(대한민국 정부, 2010)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켰으나 출산수준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 출산 수준 제고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 근거하여 추가 출산에 이러한 정부 지원정책 수혜가 정책 만족도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석결과, 한 자녀를 둔 경우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 지원정책 만족도는 두 번째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는 초기산출결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가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비용 지원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간접적 효과는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물론 추가 자녀 출산 의사는 중간 출산 결과로 최종 출산결과인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늦어진 결혼 연령과 가치관, 과도한 사교육 지출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원고에서는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에 국한하여 두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본 분석에서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일반적 만족도에는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수혜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육료 및 교육비 차등 지원과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수혜가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요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2011년 들어서 아동 가구의 하위 70%까지 전액 지원 정책을 실시하므로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수혜자 만족도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특히 낮은 유아교육·보육 지원단가나 민간 중심의 우리나라 보육이나 유아교육 공급 구조상 순수한 보육료나 교육비 이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자녀 양육비용 지원정책 만족도는 두 번째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선행연구(서문희 외, 2009)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특히 보육지원 정책은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가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사람들은 중심으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을 더 필요로 하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업모일수록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시 만족도도 높다. 현재 취업모는 미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 의사가 낮으므로 취업모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 대한민국 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민희철 외(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코·안진(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김은설·안재진·최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보육실태조사 보고-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신운정·정경희·김수봉·손창균·이수형·이지혜(200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홍식(2007). 2006년 출산과 출산 양육지원정책의 관련성.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 출산율 제고 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D'Addio, & Mira d'Ercole(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7*.
- OECD, Paris. OECD. DELSA/ELSA/WD/AEM.
- Gauthier, A. 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Oxford.
- Sleebo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 논문접수 2010년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11월 10일 / 게재 승인 12월 20일
- 교신저자: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submh@kicce.re.kr

## Abstract

### A Study of Effectiveness of Parent Subsidy of ECEC to the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Birth

Moon Hee Suh

This study analysis effectiveness of parent subsidy of ECEC to the satisfaction to subsidy policy and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birth among parents. For the analysis, materials of 2009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child rearing was partly used, and program logic model which is usually used in analyzing effectiveness of policy activities was applied.

The analysis found that parent subsidy of ECEC have effectiveness in increasing satisfaction at national subsidy policy and satisfaction at national subsidy policy have effectiveness in increasing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birth among parents with one child. In other words, even though parent subsidy of ECEC have no direct effectiveness, it have effectiveness in increasing intention of additional birth among parents with one child indirectly through intermediate variable of satisfaction at national subsidy policy. Especially sliding subsidy policy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parents and free ECEC policy for 5 years children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to feeling of general satisfaction at subsidy policy. Conside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parent subsidy policy need to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ents by providing pertinent services to just who have strong need for them. At the same time appropriateness of subsidy level is reviewed.

Key words: child care, early child education, parent subsidy, satisfaction, intention to additional birth